

## 전북-경북, 공동 현안 손 맞잡는다

### 송하진 지사-김관용 지사 탄소 클러스터 예타 통과 전주-김천 복선전철 등 추진위한 대응방안 논의

전북과 경북 도지사들이 공동 현안 사업에 협력하기로 두 손을 맞잡았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을 방문한 김관용 경북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양 도의 공동 현안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와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주-김천 복선전철 등 동서 교통망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특강을 한 후 기획조정실장과 건설국장, 경제국장과 함께 전북도를 방문해 3개의 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전북과 경북이 경쟁보다는 협력해 탄소소재 수요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을 모았다.

이어 예타 조기 통과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양 도지사가 정치권과 공동으로 중앙부처를 방문·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들은 동서3축(새만금~포항)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1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 공동추진과 새만금~포항(동서3축)고속도로, 전주~김천 복선전철 조기건설 등 전북과 경북의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도 지휘부가 국토교통부를 함께 방문해 '동서3축(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사업 국가계획 반영'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복선전철 사업'을 착수사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 사업들은 지난날 21일 전북과 경북을 포함한 7개 시도로 구성된

'중부권정책협의회'에서도 동서3축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공동협력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는 "전날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박을 했는데, 한 옥마를 문화의 우수성에 감탄했고, 많이 배웠다"면서 "전북과 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나 철도가 하루빨리 구축돼 물류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양 지자체가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의 교류 협력을 통해 쌓아온 신뢰감 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면서 "공동 현안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양 도가 힘을 모아 협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고민형 기자

## '사드 배치' 대내외 논란 박 대통령 '밀어붙이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싼 대내외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사드는 자위권 차원에서 행사된 방어 조치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한편,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등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2면·3면>

### '국민 지키기 위한 순수 방어목적의 조치'

### 경북 칠곡 등 후보지 지역 갈등 등 차단 나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던 언급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일련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거론한 뒤 "이같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군 통수권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논리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의 자위권 행사라는 의미로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당일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에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도 점차 증대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전담하는 등 한반도의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용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으로 기존에 후보지로 거론된 경북 칠곡(왜관), 경기 평택 및 오산,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의 지역 민심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드 배치의 실효성과 절차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에 안보 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용규 기자

## 여야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질타



국회의원 나향욱은 "그 자리에 대변인도 있었고 담당 공무원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왜 제식구 감싸기를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공격했다.

유은혜 의원은 "나 기획관의 발언이 과음 실언이었다든지 취중 실수하고 한 데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술로 돌리고 과음 취중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술에 취하면 아무 소리나 다 해도 되나"라며 "나 기획관이 말한 99% 개돼지, 민중의 험세로 나 기획관이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 역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사과가 아니라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당만큼은 아니

지만 나 기획관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나 기획관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간사 이장우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업 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준식 장관에게 "교육부에서 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나"며 "오늘 당사자가 지병에 가 있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의원들도 질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정리 차원에서 질의했다. 너무 답답해서"라고 맞받았다. /박용규 기자

**시원한 여름 휴가**  
진안고원에서 느껴보세요

**제8회 동향면 수박축제**  
2016. 8. 6(토) ~ 8. 7(일) 2일간  
진안군 동향면 동향체련공원

마이산의 여름, 은일원반월암, 백운동계곡, 운정길계곡